

지역 특색 담은 교육발전모델 수립

전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차 마무리 지역주도 교육 혁신·지역 인재 정주 생태계 구축 '핵심' 전략산업 연계·미래역량 강화 등 4개 전략모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차를 마무리하며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발전모델을 수립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해 공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수립한 교육발전모델은 지역주도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정주 생태계 구축 두 가지가 핵심이다. 전략모델로는 △지역 전략 산업 연

계 △지역 상생 돌봄·정주 △지역 자원 연계 △미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내 지역 간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상호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 사업을 살펴보면 부안은 부안밀 베이커리 특화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 전략 산업 연계 모델을 운영한다. 지역의 주력 생산물인 우리밀 산업과 연계, 지자체와 함께 '부안밀 제과제빵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를 중

심으로 유·초·중·고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안밀 베이커리 꿈나무를 키운다. 군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돌봄 사다리 구축을 통해 지역 상생 돌봄·정주 모델을 운영한다. 거점 늘봄기관인 다꽃늘봄 군산 운영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늘봄 배움터(동네, 대학, 생대, 기후담합대) 및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늘봄 이음버스를 지원한다. 전주는 '전주의 맛 K-푸드' 전통을 잇는 주제로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진로를 탐색하는 지역 자원 연계 모델을 운영한다. 지역 식품 자원과 결합한 생애주기별(유·초·중·고) 식생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맘투데이ابل 및 어린이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원은 드론SW 특화교육을 통해 지역 내 미래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미래역량 강화 모델을 운영한다. SW미래채움전북센터와 연계해 드론 시뮬레이터 및 코딩 장비를 갖춘 드론 SW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급 수준에 맞는 ICT교육 및 해커톤 대회를 연다. 앞서 전북교육발전특구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우수사례로 선정, 교육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의 강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교육모델을 만들어 지역인재가 전북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2025학년도 지역사회 추천 학생 교육장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수교육지원청 제공)

선행·효행 학생 격려 바른 인성교육 가치 확산

장수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지역사회 추천 학생 교육장상 수여식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지난 23일, 2025학년도 지역사회 추천 학생 교육장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행과 효행을 꾸준히 실천해 온 초·중·고 학생 20명을 선정하여 교육장상을 수여하는 자리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변을 배려하며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인 학생에게는 선행상, 충·효 정신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한 학생에게는 효행상이 수여됐다. 추영근 교육장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에서 신뢰받고 성장하는 사람은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행과 효행을 실천한 학생들이야말로 우리 지역과 사회의 희망이며, 이러한 인성의 힘이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표창이 학생 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선한 행동이 장수의 교육문화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장상 수여를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 한 명 한 명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인성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교수·학생 행동기준 명확화 최근 문제된 부정행위 사례 윤리기준 구체화... 3단계 제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D)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챗GPT 등 생성형 AI의 확산 흐름을 교육 현장에 긍정적으로 접목하고, 교수와 학생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전북대는 AI 활용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대학교가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사진은 AI 스페이스

정북대 교무처 주관으로 수립된 개정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사용 시 교수와 학생이 실제로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의 개념과 활용상의 문제점 △6개 기본 활용 원칙 △교수자를 위한 수업 활용 지침 △학습자를 위한 수업 활용 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든 교과목에서 생성형 AI 활용 수준을 전면 금지, 부분 허용, 전면 허용의 3단계로 구분해 강의계획

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과제와 시험에서 허용되는 활용 방식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생 모두가 수업 시작 단계부터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대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예시와 윤리 위반 가능 사례를 함께 제시해 책임 있는 AI 사용을 강조했다. 동시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무조건 금지가 아닌' 인간적인 적 극적 활용'을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는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전문과 함께 교수자용·학습자용 카드뉴스를 제작해 대 학 홈페이지와 학사정보시스템(LMS) 등에 게시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서 공정성과 윤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수 교무처장은 "생성형 AI는 잘 활용하면 교육의 효율성과 학습 경험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기준 없이 사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기로 교수와 학생 모두가 명확한 기준 아래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확정

전북교육청, 도내 초등학교 2명·중학교 2~3명 하향 조정해 10년 만에 복식학급 편성 기준도 감축, 소규모학교 학습권 보장

내년 도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인원을 감축 적용한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2025학년도 대비 등·음·면 급지별로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2명씩 하향 조정했고, 중학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감축(2~3명) 기준을 확정했다. 교실 밀집도가 높았던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급당 기준을 2025학년도에 이어 추가 감축했다. 특히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1학년 5명 이하, 2학년 9명 이하에서 (인접학년) 1학년 3명 이하, 2학년 5명 이하로 낮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을 통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교육부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통합 일반대학서 전문학사 수여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높이 평가

원광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사례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선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23개 제출 사례 중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원광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원광대는 2026학년도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통합 승인에 따라 부여받은 교

육부 규제특례를 활용, 통합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합 이후 학제 운영의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지역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통합 대학의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혁신 모델로 주목받았다.

박성태 총장은 "이번 성과는 통합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운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통합대학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으로 통합 이후 학제 혁신이 고등교육 규제 개선의 대표적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유사 대학 통합 및 학사 운영 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운영사례 발표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2025년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운영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학교 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선정학교, 심화형(심화형+)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담당교사들이 참여해 올 한해 운영 성과와 사례를 공유했다. 이리회초, 전주대정초, 전주관지중, 부안중, 전주호성중, 전주여자고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흡연예방 수업 운영, 흡연학생 맞춤형 금연 상담 및 사후관리, 학교 환경 개선을 통한 흡연 예방 분위기 조성 등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온 방안을 나누었다. 특히 초·중·고 학교급별 운영 사례를 통해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 운영이 사업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다. 최효선 전북교육청 학생금연지원센터의 금연상담사의 흡연학생 금연 상담 과정과 성공 사례 소개도 이어졌다. 최 상담가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 기법과 연계 지원 체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돕는 노하우 등을 전달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부안군, '부안정책연구소' 설치한다

군정 주요 현안 해결·중장기 정책 연구 협력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4일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함께 대학 내에 부안정책연구소 사무실을 설치하고 군정 주요 현안 해결과 중장기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이 직면한 에너지, 농생명, 해양 관광 등 복합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이 지역 행정과 상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연구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안정책연구소 사무실은 원광대학교 내에 설치되며, 향후 군정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광역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분석,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단순 연구 중심이 아닌 군정과 연계된 실질적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부안군 실무부서와 연구진 간 정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세미나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성진 기자



부안군 실무부서와 연구진 간 정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세미나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성진 기자

전북교육청, 2025 제3차 도박예방교육 자문위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창조미래 1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도박예방교육 사업 실효를 공유하고, 2026년 도박예방교육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위원들은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는 한편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학생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도박예방교육 지원 체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6년 도박예방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